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 2014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발표
- 학생 제출서류 유사도율 전년 대비 대폭 감소
- 대교협·한국대학신문 대학평가 관련 좌담회

국회 입법 동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99)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소식

-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2014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발표

- 4년제 대학 정시모집 모집인원 7,653명 감소
- 수시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의 정시모집 지원 금지
- 대학진학을 위한 공교육 차원의 진로진학 상담 제공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 197개 4년제 대학(교육대, 산업대 포함)의 「2014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 이번 「2014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정시모집 선발 인원 감소

- ◆ 모집인원 감소(금년도 모집인원(379,018명)의 33.7% 선발)
- '13학년도 : 135,277명 → '14학년도 : 127,624명(7,653명 감소)

구분	대학수(교)	모집인원(명)	총모집인원대비 비율(%)
2014학년도	197	127,624	33.7
2013학년도	198	135,277	35.7
2012학년도	200	145,080	37.9
2011학년도	199	150,124	39.3
2010학년도	199	158,625	41.2

※ 정시모집의 모집인원 감소는 수시 모집인원의 증가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정원감축, 학교폐쇄(경북외대), 대학의 자구노력에 의한 정원축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2 '정시모집' 전형일정

- ◆ “2014학년도 정시모집”은 12월 19일(목)부터 24일(화) 사이에 “모집군”에 따라 원서접수를 실시하고, 전형기간은 2014년 1월 2일부터 “모집군”별로 면접, 실기 등 대학별고사 진행

구분	내 용
원서접수	1) 가, 나, 가나군 : 2013.12.19(목)~23(월) (5일간) 2)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 : 2013.12.20(금)~24(화) (5일간)
전형기간	“가”군 : 2014.1.2(목)~13(월)(12일) “나”군 : 2014.1.14(화)~24(금)(11일) “다”군 : 2014.1.25(토)~2.5(수)(12일)
합격자 발표	2014.2.5(수)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 2014.2.19(수) 21:00까지
등록기간	•정시등록기간 : 2014.2.6(목) ~ 10(월)(5일) •미등록 충원 등록 : 2014.2.20(목)까지

3 핵심 전형요소 기준으로 부제 설정 실시

- ◆ 핵심 전형요소 중심의 부제명 표기를 통한 대입전형 간소화 실시

구분		부제 설정 기준
수능 중심		수능을 전형요소로 비중 있게 평가하는 전형
학생부 중심		학생부(교과)를 전형요소로 비중 있게 평가하는 전형
학생부 중심(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이 실제 참여하여 평가하는 전형
실기·적성(특기)·면접	실기 중심	실기를 전형요소로 비중 있게 평가하는 전형
	적성(특기)중심	적성(특기)을 전형요소로 비중 있게 평가하는 전형
	면접 중심	면접을 전형요소로 비중 있게 평가하는 전형

- 대교협은 부제 설정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집을 제작하여 안내하고, 대학은 동 기준에 따라 대학별 모집요강에 부제 명을 기재 안내함.

4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형 수능 대학별 반영 방법 안내

- ◆ 국어, 수학, 영어 A/B형 계열별 반영 현황¹⁾

(단위 : 개교)

구분	국어			수학			영어		
	A/B	A	B	A/B	A	B	A/B	A	B
인문계열	144	0	51	111	54	0	125	1	68
자연계열	99	47	1	118	1	48	99	0	64
예체능계	139	4	2	74	5	1	132	4	9

- ◆ A/B형 반영대학(교차 지원 허용 대학)의 가산점 현황 : B형 응시자에게 가산점 부여

<국어 가산점 현황>

구분	0%	1 ~ 5%	6 ~ 10%	11 ~ 15%	16 ~ 20%	21 ~ 25%	26 ~ 30%	31% 이상	기타	합계
인문계	35	24	56	17	8				3	143
자연계	46	11	22	12	6				1	98
예체능계	64	14	34	13	7				2	134

1) 대학의 일부 모집단위는 수능 선택반영 방법이 다를 수 있음

<수학 가산점 현황>

구분	0%	1 ~ 5%	6 ~ 10%	11 ~ 15%	16 ~ 20%	21 ~ 25%	26 ~ 30%	31% 이상	기타	합계
인문계	51	9	26	13	8				3	110
자연계	14	8	54	26	15		1		2	120
예체능계	38	4	20	8	4				1	75

<영어 가산점 현황>

구분	0%	1 ~ 5%	6 ~ 10%	11 ~ 15%	16 ~ 20%	21 ~ 25%	26 ~ 30%	31% 이상	기타	합계
인문계	28	14	28	11	35	6	5		2	129
자연계	17	8	23	12	29	6	7			102
예체능계	53	5	24	9	28	2	2		2	125

5 정시모집 유의사항

- ◆ 수시모집 최종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 금지
- ◆ 정시모집 지원은 모집 "군"별로 한 개의 대학에만 지원하여야 함
 - 한 개의 모집 "군"에 2개 대학 이상 지원하는 경우 대학입학지원방법 위반자에 해당되어 입학이 무효됨.
 - 다만, 특별법설치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는 모집 "군"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 산업대학(청운대, 호원대), 특별법설치대학(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카이스트, 3군 사관학교(육사, 공사, 해사), 경찰대학) 등

6 대학진학을 위한 공교육 차원의 진로진학 상담 제공

- ◆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수험생의 진로에 맞는 진학을 위해 공교육차원의 진로진학상담 강화
- ◆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에서는 대입상담경험이 풍부한 210여명의 대입상담교사단과 상담전문위원 진로진학 / 대학입학전형 /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관련 내용으로 연중 전화상담을 실시함
- ◆ 상담방법
 - 상담전화 : ☎ 1600-1615
 - 과년도 상담실적

구분	상담건수	운영시간
2012학년도	24,000여건	1월~ 7월 - 09:00~18:00 8월~12월 - 09:00~22:00 *대입상담전화 : ☎1600-1615
2013학년도	35,000여건	
2014학년도	11월 8일 기준 (35,000여건)	

7 대입정보 제공

◆ 정시모집 대입정보박람회 개최

- 2014학년도 정시모집 대입정보 제공과 대학의 교·직원, 현직교사로 구성된 상담교사들이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 일시 : '13. 12. 5(목) ~ 12. 8(일) 4일간, 10:00 ~ 17:00
- 장소 : 코엑스 1층 홀A
- 참여대학 수 : 113개 대학

구분	참여대학 수	비고
2012학년도	100개 대학	
2013학년도	107개 대학	
2014학년도	113개 대학	

◆ 정시모집 대입설명회 개최

- 대교협은 정확한 대입정보 제공을 위하여 전국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권역별 2014학년도 정시모집 대비 설명회를 11월 15일부터 35회 이상 개최하여 정시모집 상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

◆ 정시모집 정보 제공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에 발표되는 「2014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책자로 제작하여 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과 관련 기관에 배포하며, 「KCUE 대입정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11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 서비스 및 파일 제공

※ 자세한 사항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 보도자료 참고

◆ 11월 24일(목) 오전부터, 본도협에 순차적 배포됩니다.

보도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13. 11. 11(화) http://www.kcue.or.kr
전화 : 02-4899-3000, 3000 | 팩스 : 02-4899-3000 | 이메일 : kcue@kcue.or.kr

2014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발표

- 선별 대학 정시모집 모집인원 7,859명 감소
-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1차 응시원서 접수와 정시모집 지원 권리
- 대학별별 지원 권고와 지원 시 유의사항 상세 제공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기석)는 전국의 학생, 학부모,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4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소개하는 「2014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11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11월 12일(수)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대학(교)에, 산업체 포함의 2014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 이번 「2014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정시모집 선발 인원 감소

· 모집인원 감소(감산도 포함) 37.0%(2013년 대비 33.7% 감소)
· '13학년도 : 136,277명 → '14학년도 : 127,624명(6,653명 감소)

구분	13학년도	14학년도	감소율(%)
2014학년도	136,277	127,624	35.7
2013학년도	169,421	136,277	55.7
2012학년도	200,000	169,421	37.9
2011학년도	199,000	169,421	39.3
2010학년도	199,000	169,421	41.2

※ 정시모집 모집인원 감소는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1차 응시원서 접수와 정시모집 지원 권리 확대, 대학별별 지원 권고, 대학별 지원 시 유의사항 상세 제공 등으로 발생

2014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본도 첨부자료)

2013. 11.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합천대학교(합천·장기·가곡)

이사항은 「정시모집, 전형실적 및 전형사항」에 포함됨

■ 주요사항 요약(2014학년도 대비)

구분	13학년도	14학년도	감소율(%)
모집인원	136,277	127,624	35.7
1차 응시원서 접수	136,277	127,624	35.7
정시모집 지원	136,277	127,624	35.7
정시모집 합격	136,277	127,624	35.7
정시모집 지원	136,277	127,624	35.7
정시모집 합격	136,277	127,624	35.7
정시모집 지원	136,277	127,624	35.7
정시모집 합격	136,277	127,624	35.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2014학년도 수시 1차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 제출서류 유사도율 전년 대비 대폭 감소

- 수시 1차 유사도검색시스템 활용 대학 전년 대비 14개교 증가 ('13학년도 94개교, 227,957명 → '14학년도 108개교, 302,880명)
- 자기소개서 의심수준 이상(유사도율 5% 이상) 인원 전년 대비 59.4% 대폭 감소 ('13학년도 2,899명 → '14학년도 1,177명)
- 교사추천서 의심수준 이상(유사도율 20% 이상) 인원 전년 대비 28.6% 대폭 감소 ('13학년도 10,617명 → '14학년도 7,576명)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4학년도 수시 1차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대교협 유사도검색시스템 활용 대학이 증가하였고, 학생 제출서류(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에 대한 유사도 검색결과 유사도율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 대교협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2014학년도 전형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통양식을 개선하여 정부지원 대학(66개교)을 중심으로 활용을 강화하고, 학생 제출서류에 대한 유사도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대교협은 앞서 보도자료(2013. 7. 24)를 통해 ‘입학사정관제 학생 제출서류의 유사도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자료(2013.7.24) 주요사항 요약

- 웹검색 추가 등 유사도검색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학생 제출서류 유사도 검증기준 강화
- 2014학년도 전형부터 정부지원 대학(66개교)을 중심으로 유사도검색시스템 활용 및 「유사도검증가이드라인(2012.11)」 준수를 의무화하고, 입학사정관전형 실시 모든 대학(2014학년도 수시 126개교)으로 확대
-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심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소개서(5% 이상) 및 교사추천서(20% 이상)에 대하여 대학은 유선확인, 현장실사, 본인확인, 교사확인, 심층면접 등을 통해 엄정히 검증
- 전형 종료 후 지원서류에 대하여 재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 표절·대필·허위 등이 발견된 경우 입학 이후라도 입학 취소 조치

-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14학년도 수시 1차 입학사정관 전형 유사도검색시스템 활용 대학 수는 총 108개교로 전년(수시 1차)에 비해 14개교 증가하였고, 검색 대상 학생 수는 총 302,880명으로 전년(수시 1차)에 비해 74,923명(32.9%) 증가하였으며,

〈수시 1차 유사도검색시스템 활용 대학 및 검색 대상 학생 수〉

구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비고
활용 대학 수	94개교	108개교	△14개교
검색 대상 학생 수	227,957명	302,880명	△74,923명

- 2014학년도 수시 1차 입학사정관 전형 유사도검색시스템 운영 결과, ‘자기소개서’는 의심수준 이상(유사도율 5% 이상) 인원이 총 1,177명으로 전년(2,889명) 대비 59.4% 대폭 감소하였고, ‘교사추천서’는 의심수준 이상(유사도율 20% 이상) 인원이 7,576명으로 전년(10,617명) 대비 28.6% 대폭 감소하였다.

〈수시 1차 ‘의심수준 이상’ 건 수〉

구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비고	
자기소개서	의심수준 이상 학생 수 (유사도율 5% 이상)	2,889명	1,177명	▽1,712명 (▽59.4%)
교사추천서	의심수준 이상 교사 수 (유사도율 20% 이상)	10,617명	7,576명	▽3,041명 (▽28.6%)

- 대교협은 향후 ‘수시 2차’ 및 ‘정시’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 대학에도 유사도검색시스템을 추가 운영 지원하고, 정부지원대학이 ‘의심수준 이상’ 서류에 대하여 어떻게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했는지를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대학이 ‘사후검증’을 할 수 있도록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014년 2월 7일(금) ~ 9일(일)까지 사후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 대교협 관계자는 “올해 유사도검색시스템 활용 대학은 늘어난 반면,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유사도율이 전년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볼 때, 학생 및 교사들이 점차 제출서류의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부터 각 대학이 재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남아있는 정시 등 전형에서도 제출서류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교협은 ‘의심수준 이상’ 서류에 대하여 대학이 유사도검증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고, 공정성확보시스템을 통해 ‘의심수준 이상’ 지원자에 대한 각 대학의 확인방법과 합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표 1〉 2014학년도 수시 1차 입학사정관 전형 유사도검색시스템 활용 대학 현황

구분	대학명
정부지원 대학 66개교 (가나다순)	가톨릭대,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상대, 경운대, 경인교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교대, 꽃동네대, 단국대, 대구교대, 대전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교대, 부산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우석대, 울산과학기술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아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중앙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과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외대, 한동대, 한림대, 한양대
독자설시 대학 42개교 (가나다순)	가천대, 강릉원주대, 건국대글로벌(충주), 건양대, 경동대, 경일대, 고신대, 관동대, 국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남서울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경주), 동명대, 목원대, 배재대, 백석대, 상지대, 선문대, 세명대, 세종대, 순천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원주), 우송대, 제주대, 중원대, 평택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밭대, 홍익대

〈표 2〉 2013~2014학년도 수시 1차 입학사정관 전형 유사도검색 결과 수준별 현황

구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비고	
자기소개서	유익수준 (유사도율 5% 미만)	225,068명 (98.73%)	301,703명 (99.61%)	△61,314명 △0.88%
	의심수준 (유사도율 5% ~ 20%)	2,548명 (1.12%)	1,012명 (0.33%)	▽1,536명 ▽0.79%
	위험수준 (유사도율 20% 이상)	341명 (0.15%)	165명 (0.06%)	▽176명 ▽0.09%
교사추천서	유익수준 (유사도율 20% 미만)	91,479명 (89.60%)	160,758명 (95.50%)	△69,279명 △5.90%
	의심수준 (유사도율 20% ~ 50%)	8,904명 (8.72%)	6,072명 (3.61%)	▽2,832명 ▽5.11%
	위험수준 (유사도율 50% 이상)	1,713명 (1.68%)	1,504명 (0.89%)	▽209명 ▽0.7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세계대학평가, 한국에 물음을 던지다〉

대교협 · 한국대학신문 대학평가 관련 좌담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한국대학신문과 공동기획으로 정부주도 대학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1월 5일 서울 장충동 소재 서울클럽에서 좌담회를 열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내 대학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참석자들은 “대학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대로 된 평가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가경쟁력도 생긴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대학평가 체계와 방법, 그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하나로 뜻을 모았다. 2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좌담회를 주요 발언 중심으로 정리했다.

패널 명단(사회 외 이름 가나다 순)

- 사회 서민원 한국대학평가위원장(인제대 교수, 이하 민)
- 박순진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대구대 기획처장, 이하 박)
- 서경아 전국대학평가협의회 부회장(경희대 평가팀장, 이하 경)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하 안)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하 임)

□ 민 : 오늘 좌담회는 4회에 걸쳐 연재된 <세계대학평가, 한국에 물음을 던지다>의 마지막 차례다.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와 관련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건전한 대학평가 방향과 대안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대학평가의 질뿐 아니라 정부 평가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선 정부의 현행 대학평가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각국 대학평가 시스템과 이슈 중 논의해보면 좋을 듯하다.

□ 박 : 기획기사들을 보고난 뒤 우리나라 대학평가가 너무 급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행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평가는 ‘대학이 어떤 모습을 갖추었느냐’보다는 ‘재정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렇다보니 대학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 연재기획 중 프롤로그에서 대학평가의 기본적인 목적과 철학이 무엇인지 묻는데, 우리 평가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다. 외국 사례를 통해 기본적으로 대학평가가 왜 필요한지, 평가를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 경 : 동의한다. 우리나라 대학평가시스템의 한계는 재정배분을 원칙으로 한 분배의 원칙에 있다. 현 평가지표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대학마다 설립 목적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를 반영할 질적 지표가 개발이 안 되어있다. 평가에 있어 미국은 연구와 교육이 균등한 반면 국내는 연구에 집중돼 있다. 교육관련 지표가 상당히 많이 개발돼야 한다. 특히 수요자인 학생들조차 잘 이해할 수 없는 양적 지표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현행 대학평가가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 평가 자체보다는 평가결과를 대학과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들과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민 : 좋은 지적 해주셨다. 최근 세계적인 동향을 보더라도, 각 대학 인증평가에 학생들의 학습 성과 부분을 중시하고 있다.

□ 임 : 연재기획 기사들을 꼭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와 차이가 굉장히 크다. 양적 지표를 적용하지 않거나 대학에 대한 패널티가 없는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말이다. 근본적으로 ‘대학평가를 왜 하는가’라는 목적 자체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이 든다. 현행 대학구조조정 평가처럼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 같이 학벌 서열화·수도권 중심의 국내 대학토양을 감안한 뒤 평가방식을 설계해야 하지 않았나 싶다.

- 민 : 참고로 설명을 덧붙이자면 국내 대학평가는 1982년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자율적 평가 시스템을 갖추긴 했다. 1990년대 말부터 정부가 재정지원을 목표로 평가체제를 도입했고, 2000년대 후반 고등교육법에 교육부가 대학평가인증기구를 인정해주는 형태로 바뀌면서 정부가 대학평가를 주도하게 된 측면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한경쟁시대가 되면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대학평가를 재정배분과 연계하기 위한 경향을 띠고 있다.
- 안 :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부실대학'을 가려내는 형태로 나타났다. 반값 등록금 여론이 높아지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고등교육 예산지원 확보계획이 수립될 당시 사회적으로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상당했다. 정부주도 대학평가가 상당히 구성원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과 지원이 미미하고 서열화, 지역대학의 고통 등이 충분히 예견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 '지방대 죽이기' '서열화 고착' 등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학은 사회를 가장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취업률을 높은 비중으로 경량평가 하겠다고 하니 이는 대학을 종속시키고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만약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와 자치활동 활성화, 교직원들의 사회적 기여 등을 지표로 대학을 정성평가 한다면 고등교육이 사회를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소 추상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대학이 이 사회와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민 : 가장 처음 연재된 미국의 대학평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학평가기구를 자율적으로 설립하고 평가해왔기 때문에 일본과 중화권 국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대학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대학평가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한다.
- 박 : 미국의 경우 시민들이 국가 설립을 주도했던 역사적 배경이 작용한 것 같다. 보다 전문적인 대학협의체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국가가 이를 참고해 배분하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비해 국내 대학평가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크게 개입되다보니 고착화된 서열화를 더욱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대학평가를 논하기 전에 국가철학과 교육철학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의 현행 대학평가 방식과 양적 위주로 치우친 지표,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적 가치

가 부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

- 임 : 덧붙이자면 정부는 대학평가를 대학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자체는 이미 고등교육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실제로 지역대학 황폐화, 기초학문 축소, 비정년 교원 처우 악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 경 : 지적한 것과 같이 교육기관을 평가하는 지표에 사회적 가치를 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각 대학의 자율성, 고유성, 학문의 책임성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대학평가의 지표는 결국 고등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을 가리키게 돼있다. 이제는 국가적으로 명확한 대학평가의 정의와 목표, 기준을 명확히 세울 시점이 됐다. 그래야 교육강국도 되고, 국가적 숙원인 노벨과학상 수상자도 배출할 수 있지 않겠나.
- 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진행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지표는 대학 현장에서 볼 때 정부 평가지표보다 오히려 설득력 있다. 대학으로서의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기 때문이다. 즉, 대학들의 설립 목표와 기본적 여건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때문에 평가목표도 분명하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 대학평가는 그 기준이 너무 단순하다.
- 임 : 동의한다. 현재 고등교육법을 살펴보면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교육여건을 명시하고 있다.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 재정을 차등지원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엄연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평가를 통해 페널티를 줄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강제하고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구조조정은 고등교육법 특례조항을 만들어서라도 비만한 대학을 줄이도록 하고, 대학평가는 기본 취지를 살려 지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 안 : 정부는 어려운 지역대학을 도와주면서 국가의 균형발전, 고등교육의 질 발전을 꾀하고 민간은 오히려 혹독한 평가가 있는 틀로 가는 것이 온당하다. 학령인구 감소가 강력한 구조조정 퇴출을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정부가 안해도 대학이 알아서 한다. 서울 최상위권 대학들은 이미 정원이 4~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비만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학 서열화와 특정대학의 권력 고착화까지 우려된다.
- 민 : 유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자. 영국은 평가를 기반으로 정부가 재정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갖췄

- 다. 프랑스는 평가기구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그러나 정부가 권한을 휘두르는 형태는 아니다. 유럽 대학평가는 전문성과 자율성의 관계가 명확히 나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안 :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68혁명 등 대학이 중심이 된 사회변혁을 겪은 뒤 무상 고등교육에 대한 의식이 발달했다. '출생선은 달라도 사회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는 철학이 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한다. 국내는 배경이 다르다. 처벌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등교육을 바라보는 국가적 철학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 경 : 유럽이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를 통보해 처벌이나 경고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게 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격려하는 특징이 있다. 평가결과를 공유해 정해진 교육과정은 허파하는 효과를 내야 한다. 개선의지를 복돋는 자극이 평가의 역할인데 국내 평가는 대학가에서 '싫은 평가'가 됐다. 평가결과와 유익성은 논의되지 않는다.
- 박 : 평가결과를 활용할 때에도 자율성을 줘야 한다. 정부가 평가결과를 활용할 방법을 다 정해놓지 않았다. 평가결과를 놓고 대학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철저하게 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우수사례를 공유할 기회도 없다. 대교협 대학평가기관인증은 다른 대학 사례를 살필 여유가 있는데 정부평가는 불가능하다.
- 민 : 일본 대학평가의 특징은 자율협의체와 정부주도 평가가 공존한다는 점이다. 정부와 무관하게 대학을 평가하는 기구가 11개에 이른다. 국가가 국립대 법인화 뒤 질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평가도 있다. 민간기구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정부는 이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 체계다. 다양한 평가체제를 인정하고, 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중화권은 또 다르다. 홍콩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를 하고, 그런 기구를 운영한다. 대만도 국가발전에 대학을 잘 활용한 경우로, 국가자체의 생존과 관련해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있고 국가와 평가기구의 관계가 균등하다.
- 박 : 중국은 우리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중국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일부 도입한 이후에서야 고급 인재를 양성키 위해 전략적으로 대학을 육성, 발전시키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수요가 많지 않아 이를 유인할 목적으로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의 질 관리에 들어간 것이 역사적 배경이자 과정이다. 오히려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학령인구 감소 이슈를 다뤘기 때문에 참고해 볼만하다.

- 민 : 일본은 사회적으로 사학의 영향력이 강하다. 그래서 평가가 쉽진 않았다. 1947년 대학기준협회가 있었지만 90년대까지 잘 굴러가지 않았다. 일본에서 국내를 방문해 평가체계를 부러워하기도 했다. 국내 대학기관인증평가는 국내 대학의 인프라를 다지는 데 역할을 했다.
- 경 : 5년여 전에 비해 인프라 구축에 효과가 있었던 것은 맞다. 문제는 인프라 구축 이후 평가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는 질적 평가가 시작됐어야 했는데 여전히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표가 그러하니 대학들은 여전히 정량적 성과를 내는 곳에만 예산을 쓴다. 이제 질적 발전은 학교에 맡겨야 한다.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 일본의 평가시스템을 눈여겨 볼 때다.
- 민 : 대학평가는 항상 대학들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서 대학자체평가(Self study)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체평가만으로는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으므로, 동료평가(Peer review)를 병행한다. 대학자체평가와 동료평가가 모여 진짜 신뢰할 만한 평가가 나온다.
- 박 : 그 같은 평가를 긴 안목에서 진행해야 한다. 정부의 현행 평가방식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국정목표가 너무 많이 담겨있다. 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지방대학도 살려야 하고, 특성화도 해야 한다. 너무 많은 목표를 추진하려니 엇박자가 많다. 정책목표를 단순화하고 평가의 기본목적인 교육적 가치에 맞는 평가를 해야 한다.
- 민 : 대학자체평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외부평가는 구조적으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 균형이 깨지면 고등교육이 발전하기는 어렵다. 평가결과로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을 나누는 것보다는 대학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 안 : 평가는 고등교육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대교협이 하든, 정부가 하든, 또 다른 권위 있는 민간기구가 하든 상관 없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고등교육이 발전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평가가 돼야 한다.
- 임 : 평가를 위한 전제조건 자체가 없다. 대학의 양극화와 서열화, 재정위기 등 문제가 많다. 근데 평가가 이 위기를 더욱 조장시키지 않나. 그리고 평가지표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면 의사결정에 앞서

대학구성원과의 대화는 꿈도 못 꾀다.

- 경 : 결국 고등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부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어떤 인재를 길러낼 것인지, 그 인재가 세계적 수준에 걸맞는지 고민하고 그런 인재를 길러내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 민 : 국내 고등교육의 위기가 코 앞에 있다. 학령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을 자체도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학의 위기를 건너내는 길은 평가체계에 있다. 패널 분들 모두 선진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해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해주셨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진짜 대학평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좌담회를 마무리하려 한다.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소식]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 대학 입학전형료 잔액 반환 방법 등 마련
- 대학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범위 확대
- 의대 실습교육 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 기준 마련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이 개정('13.11.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육정책수립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요구하는 자료제출 범위를 확대하고,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의 실습교육 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은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의 실습교육 의무 위반여부를 평가할 때 관련기관 의견을 들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입 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 앞으로 대학의 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먼저, 착오로 과납된 전형료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대학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 등에 의한 의료기관 입원, 본인의 사망이 해당된다.
 - 또한, 단계별로 진행되는 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응시자에게도 이후 단계에 드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아울러,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은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대학의 장은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전형료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만, 계좌 이체 시에는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으며, 반환 금액이 계좌 이체 수수료 이하로 소액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 한편, 대학의 장은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위의 내용은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2. 대학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범위 확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 교육부장관이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대학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기존의 '통계자료'에서 '일반자료'로까지 확대하였다.

3. 의대 실습교육 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 기준 마련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관련)

-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실습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습조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하였다.
- 이에 법령상 실습조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형식적인 물적 시설 구비여부만이 아닌, 실제로 학생의 실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습교육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평가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특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실습교육 의무 1차 위반 시 해당학과 100% 모집정지, 2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 교육부는 동 시행령 개정으로

- 합리적인 전형료 설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형료의 인하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국경과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미 '14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료의 경우 전국입학처장협의회, 전국입학관리자협의회 등과 함께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평균 1,592원 인하*되었으며, 앞으로 '14학년도 경시 모집에서도 전형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 경희대 학교생활충실자전형 : ('13학년도) 95,000원 → ('14학년도) 70,000원
 광운대 광운참빛인재전형 : ('13학년도) 90,000원 → ('14학년도) 60,000원

- 동국대 사회기여배려자전형 : ('13학년도) 75,000원 → ('14학년도) 50,000원
 성신여대 자기주도학습자전형 : ('13학년도) 80,000원 → ('14학년도) 70,000원
- 또한 대학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확대되어 내실 있는 고등교육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 학과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한 의과대학 운영을 막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 동향]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99)

○ 발의자 및 발의일자
 배재정의원 등 21인(2013.11.11)
 (김광진 김기춘 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김현미 도종환 박남춘 배기운 배재정 신경민 안민석 오영식 유기홍 윤관석 은수미 이상민 전순옥 정진후 진성준 한명숙)

○ 입법내용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학생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생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그 구성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11조제2항).

